

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 10년의 연구동향과 학문적 영향력*

김민정**

한국외국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국문 초록

본 연구는 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의 지난 10년간 연구동향과 학문적 영향력을 분석하여 해당 학술지가 언론법 연구에 기여한 바를 조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대상은 2015년 창간 이후 2024년까지 게재된 총 102편의 논문이며, 연구방법으로는 문헌계량학(bibliometrics)과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명예훼손·모욕·협오표현(15.7%), 프라이버시(14.7%), 신기술 연계 복합 주제(11.8%), 미디어 규제법(10.8%) 등이 가장 많이 연구된 주제였으며, 이는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법적 이슈가 지속적으로 학문적 관심을 받아왔음을 시사한다. 연구방법으로는 법해석학적 접근(법 규정 중심, 판례 중심, 법 규정+판례 분석)이 65% 이상 차지하여 법리적 분석이 주된 연구 방식임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연구자의 전문 분야(언론학 vs. 법학)에 따라 연구주제 및 연구방법 선택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언론학 연구자들은 미디어 규제법 주제 및 양적연구방법을, 법학 연구자들은 프라이버시, 신기술 관련 주제 및 법해석학적 연구방법을 보다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연구 협업을 보면, 공동연구 비율이 13.7%에 불과하고 법학자-언론학자의 공동연구 사례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용을 토대로 학문적 영향력을 파악한 결과, <미디어와 인격권>은 신문방송학과 법학 분야의 대표 학술지들

* 이 연구는 2024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 mkhufs@gmail.com

과 긴밀한 인용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법학과 언론학의 융합 연구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학술지 영향력지수(Impact Factor: IF)가 최근 하락했고 <미디어와 인격권>의 자기 인용비율이 높다는 점은 연구 확산 범위가 제한적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학술지의 향후 발전 방향으로서는 법사회학적 접근 확대, 학제 간 협업 강화, 디지털 시대의 법적 쟁점 연구 심화, 학술적 영향력 확대 노력 등을 제안한다.

주제어: 연구동향, 메타 분석, 문헌계량학, 내용분석, 인용분석

목 차

- I. 서론
- II. 이론적 논의
 - 1. 연구동향 분석의 중요성 및 방법론
 - 2. 국내 언론법 연구동향을 분석한 선행연구
-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 1. 연구문제
 - 2. 연구방법
- IV. 연구결과
 - 1. 연구된 주제 및 연구대상 미디어 유형
 - 2. 활용된 연구방법
 - 3. 연구자 속성 및 협업
 - 4. 학술지의 학문적 영향력
- V. 결론

I. 서론

학술지는 연구자들이 연구결과를 공유하는 장으로 학문 발전을 유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언론법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이며,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중위’)가 발간하는 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은 언론법 분야 주요 학술지 중 하나로 관련 학문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2015년에 창간된 <미디어와 인격권>은 2018년에 한국연구재단 등재 후보 학술지로 선정되었고, 2020년 1월에 등재 학술지가 되어 지금까지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미디어와 인격권>의 학문적 역할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짚어볼 수 있다. 하나는 미디어학, 법학, 윤리학이 교차하는 다양한 연구 성과를 발표하며 언론법 분야의 학문 발전을 유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언론법 문제를 적절히 다루기 위해서는 언론과 법에 관한 이해가 필수적이지만, 법학자 중에는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많

지 않고 언론학자 중에는 법학을 체계적으로 공부한 사람이 많지 않다. 이로 인해 언론법은—독립된 연구 분야로서의 중요성과 관련 지식에 대한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관련 연구자 수가 많지 않고 연구 성과물의 숫자도 상대적으로 적은 일종의 ‘딜레마’ 상황에 놓여있다(조연하, 2019). 융합 분야를 다루는 학술지로서 〈미디어와 인격권〉은 이러한 딜레마 상황을 해결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미디어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고도로 매개된 사회로 진입한 이후 인격권 보호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언중위는 〈미디어와 인격권〉 발간 목적을 “새로운 뉴스 플랫폼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수용해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장을 마련”하는 것이라 밝히고 있다.¹⁾ 디지털 미디어 환경 속에서 발생하고 있는 새로운 법적, 윤리적 쟁점에 관한 학문적 논의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도 〈미디어와 인격권〉의 역할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 10년의 연구동향과 학문적 영향력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5년 창간호부터 가장 최근(2024년 12월)에 발간된 제10권 3호까지, 〈미디어와 인격권〉에 게재된 총 102편의 논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학술 연구의 경향과 학술지의 학문적 영향력 등을 알아본다. 지난 10년간의 연구 성과를 비판적으로 고찰해 학문적 담론을 진전시키고 미디어 환경의 변화 속에서 〈미디어와 인격권〉이 이끌어야 할 연구 방향과 과제를 제안함으로써 학문적, 실무적 통찰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논의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연구동향 분석의 중요성 및 그러한 작업에 활용되는 연구방법들을

1) 여기 서술한 학술지 발간 목적은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 〈미디어와 인격권〉 학술지 소개 페이지(<https://www.pac.or.kr/kor/pages/?p=221>)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다. ‘언론중재위원회 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 발간에 관한 예규’에는 학술지 발간 목적이 별도로 서술되어 있지 않다. 학술지 발간 목적을 온라인상의 학술지 소개 페이지뿐만 아니라 예규에 공식적으로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

짚는다. 아울러 국내 언론법 연구동향을 분석한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제3장에서는 앞선 논의를 토대로 구체적인 연구문제들을 도출하고 본 연구가 활용한 연구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제4장은 연구결과를 제시한다. 내용분석을 통해 파악한 주요 연구주제, 연구대상 미디어 유형, 연구방법, 연구자 간의 협업 및 연구자의 전문 분야 등에 대해 살핀 후, 문헌계량학을 통해 파악한 학술지의 학문적 영향력을 논한다. 제5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종합하고, 학술지의 발전 방향에 대해 제안한다. 본 연구의 한계점도 함께 짚는다.

II. 이론적 논의

1. 연구동향 분석의 중요성 및 방법론

과학적 연구의 발전은 지속적으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확장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토머스 쿤(Kuhn, 1962)이 주창한 패러다임 변화(paradigm shift)에 따르면, 학문적 연구는 크게 점진적 발전(일반 과학, normal science)과 혁신적 변화(과학 혁명, scientific revolution)의 단계를 반복하며 진화한다. 점진적 발전 단계에서는 기존의 연구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한 연구들이 누적되며, 혁신적 변화 단계에서는 기존 패러다임이 한계를 드러내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된다. 그런데 개별 연구는 독립적으로 수행되기 때문에, 특정 학문 분야에서 어떤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구방법론과 주요 연구결과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학문적 연구동향을 분석하는 것은 해당 학문이 현재 어떤 발전 단계에 있는지를 평가하고, 연구 패러다임이 학계에서 어떻게 확립되었는지를 이해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현재까지의 연구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

고, 향후 연구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Tranfield et al., 2003).

연구동향을 분석하는 방법은 크게 메타 분석(meta-analysis), 문헌계량학(bibliometrics),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으로 나눌 수 있다. 연구 성과를 보다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연구 방향을 예측하는 데 활용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각 방법은 연구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식과 목적이 다르다. 각각의 개념과 주요 기법을 간략히 짚어본다.

첫째, 메타 분석(meta-analysis)은 특정 학문 분야에서 수행된 다수의 연구를 체계적으로 수집해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이다(Galss, 1976). 개별 연구에서 얻은 데이터를 종합함으로써, 단일 연구보다 더 강력한 결론을 도출하고 연구결과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Borenstein et al., 2011). 메타 분석은 주로 의학, 심리학, 사회과학에서 실험 연구나 임상 연구의 결과를 통합하는데 활용된다(Borenstein et al., 2011). 가령 의학 분야에서는 특정 치료법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다수의 임상 연구를 분석하는 메타분석을 수행해 개별 연구들이 제시한 치료 효과를 통합하고 일반화된 결론을 도출한다. 메타 분석에서 사용하는 주요 기법은 효과 크기(effect size) 계산(Cohen, 1988), 고정효과모형(fixed-effects model)과 변량효과모형(random-effects model)(Hedges & Vevea, 1998), 이질성(heterogeneity) 분석(Higgins & Thompson, 2002), 출판 편향(publication bias) 평가(Egger et al., 1997) 등이 있다.

둘째, 문헌계량학(bibliometrics)은 학술 논문의 출판 및 인용 패턴을 분석하여 연구동향과 학문적 영향력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Pritchard, 1969). 도서관학, 정보학, 과학기술정책 연구 등에서 주로 활용되며(Van Raan, 2005), 특정 학문 분야의 연구 흐름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Bhunja & Singh, 2025; Farzam et al., 2025; Yadav et al., 2024). 문헌계량학에서 사용하는 주요 기법에는 인용분석(citation analysis), 참고문헌 분석(reference analysis), 공인용 분석(co-citation analysis), 연구 협력 네트워크 분석(co-authorship & citation network analysis), 저널 영향력 분석

(journal impact analysis) 등이 있다.

인용분석은 논문의 피인용 횟수를 분석하여 연구의 영향력을 평가하는 방법이고(Garfield, 1979), 참고문헌 분석은 논문에 인용된 참고문헌을 분석하여 연구의 기반을 파악한다(Small, 1973). 공인용 분석은 논문들이 함께 인용되는 빈도를 분석하여 연구 분야 간 연관성을 조사하는데(Small & Griffith, 1974) 반해, 연구 협력 네트워크 분석은 연구자 및 기관 간 협력 관계를 시각화한다(Newman, 2004). 저널 영향력 분석(journal impact analysis)은 특정 학술지의 영향력을 평가하기 위해 저널 영향력지수(Impact Factor, IF) 및 h-지수(h-index) 등의 지표를 활용한다.

셋째,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은 연구 논문의 텍스트 데이터를 정성적(qualitative) 또는 정량적(quantitative)으로 분석하여 연구주제, 방법론, 연구결과의 경향을 파악하는 방법이다(Krippendorff, 2004). 문헌계량학과 달리, 논문의 내용 자체를 분석하여 연구동향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Neuendorf, 2017). 주요 기법으로는 주제 분석(topic analysis), 코딩 분석(coding analysis),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이 있는데, 주제 분석은 연구주제를 분류하고 변화 추이를 분석하는 것이고(Blei et al., 2003), 코딩 분석은 논문의 텍스트 데이터를 특정 기준에 따라 코딩하여 패턴을 도출한다(Krippendorff, 2004). 텍스트 마이닝은 자연어처리(NLP: Natural Language Processing)를 활용하여 논문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개념과 구조를 분석한다(Feldman & Sanger, 2007).

요약하면, 메타분석은 동일한 연구주제를 다룬 개별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이고, 문헌계량학은 학술 논문의 출판 및 인용 패턴을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기법이다. 반면, 내용분석은 연구 논문의 텍스트 내용을 정성적 또는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연구주제와 방법론의 경향을 파악하는 데 사용된다.

본 연구는 단일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전체를 연구대상으로 삼아 진행한다. 따라서 개별 연구의 통계적 효과 크기를 종합하는 메타 분석 기법은 본 연구대상에 적용하기에 적절치 않다. 이에 본 연구는 문헌계량

학과 내용분석기법을 적용하여 <미디어와 인격권>에 나타난 연구동향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학술지의 영향력을 평가하고자 한다.

2. 국내 언론법 연구동향을 분석한 선행연구

언론법은 헌법상 언론 자유의 이념과 이를 구체화하는 법률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성낙인, 1994). 언론법 연구는 학제 간 연구 역량을 활용하여 언론과 법의 관계를 조망하고 체계적으로 설명하며, 언론의 자유와 법적 규제 간의 갈등을 조화롭게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조연하, 2019).

현재까지 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에 게재된 연구 성과물만을 대상으로 한 언론법 연구동향 분석은 이루어진 바 없으나, 국내 언론법 연구동향을 다룬 선행연구들은 다수 존재한다(이승선, 2005; 이재진·이승선, 2008; 이승선·이재진, 2011; 이승선, 2014; 이재진·박성순, 2015; 김민정, 2017; 이승선, 2018; 조연하, 2019; 최영재, 2021 등).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각기 다른 시기에 상이한 분석 대상(학술지, 학위논문, 단행본 등)을 기반으로 진행된 관계로, 연구결과를 비교하거나 국내 언론법 연구동향을 일관되게 정리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의 주요 결과를 종합하면 한국 언론법 연구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초기 대표 연구로 이승선(2005)은 1990년부터 2004년까지 출간된 언론법 관련 박사 학위 논문 97편과 <한국언론학보>, <한국방송학보>, <언론중재>에 게재된 논문 195편을 분석했다. 연구 목적은 언론법 연구 영역을 범주화하고 연구주제, 연구자 속성, 연구방법론 등을 파악하는 것이었다. 연구 결과, 법학자들은 표현의 자유와 기본권 간의 갈등,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에 대한 연구를 주요 연구영역으로 삼았고, 언론학자들은 방송 관련 정책 제도 연구나 저널리즘 영역에 보다 큰 관심을 보였다. 또한 약 60%의 연구들이 법학 전공자들에 의해 수행되었음을 확인했다

(이승선, 2005).

이승선은 2005년 연구 이후에도 단독연구(이승선, 2014; 이승선, 2018)와 공동연구(이재진·이승선, 2008; 이승선·이재진, 2011)를 통해 지속적으로 언론법 연구동향을 분석해 왔다. 연대순으로 주요 연구결과를 정리한다. 이재진·이승선(2008)은 2007년에 발표된 서적, 학위 논문 및 학술논문 97편을 분석했다. 연구결과, 학술논문의 57.7%는 법학전공자들에 의해, 42.3%는 언론학 전공자들에 의해 발표되었고 언론학자들은 판례에 대한 양적분석과 실증분석 방법 등을 활용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법학 전공자들은 전통적인 법학연구방법에 주로 의존하고 있었다. 연구주제로는 표현의 자유와 기본권, 명예훼손 등 인격권,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이재진·이승선, 2008). 이승선·이재진(2011)은 2007년~2010년에 발간된 법학 및 언론학 분야 학술지에 게재된 언론법 논문과 2009년~2010년에 출판된 언론법 관련 단행본 및 학위논문을 분석했다. 연구 결과, 법학 배경을 가진 연구자들이 언론학 분야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는 방식으로 학문 간 교류가 일부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제한적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확인했고, 연구주제에서는 저작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 관련 연구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이승선·이재진, 2011). 이승선(2014)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기간을 중심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2007년~2010년 게재 논문도 통합하여,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게재된 언론법제 관련 논문을 분석했다. 연구 결과, 언론법 연구는 여전히 법학 기반의 언론법 학자들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학 기반 학자들은 ‘저작권’, ‘개인정보보호’, ‘표현자유기본권’ 관련 주제를, 언론학 기반 학자들은 ‘미디어정책’, ‘표현자유기본권’, ‘심의자율규제’ 등의 주제를 주로 다루고 있었다(이승선, 2014).

이승선(2018)은 한국연구재단 등재 및 등재후보학술지에 2015~2018년에 게재된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 논문 326편과 2010년 이후에 나온 학위논문 125편을 분석했는데, 해당 연구가 파악한 주요 연구동향은 다음과 같다. 연구방법론 측면에서는 판례분석 및 개별 사례 평가가

주로 활용되었고, 연구자의 전공 배경은 법학 전공자가 지배적이며, 언론학 기반 연구자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법학 기반 연구자들은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표현의 자유 및 기본권, 명예훼손 및 인격권 보호 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온 반면, 언론학 기반 연구자들의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고 연구주제가 미디어 정책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다.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분야 연구가 집중적으로 게재된 학술지는 <미디어와 인격권>과 <언론과 법>이었는데, 인격권 관련 주제 가운데는 프라이버시 침해가 가장 활발히 연구되고 있었고, 전통적으로 중요 연구주제인 명예훼손과 관련해서는 성범죄 관련 사실적시 명예훼손 및 명예훼손 비범죄화 논의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었다. 또한 혐오표현과 표현의 자유 간의 갈등을 다루는 연구, 가짜뉴스,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관련 연구가 증가하는 추세였다(이승선, 2018).

김민정(2017)은 2016~2017년 사이에 총 18개의 저널에 발간된 82편의 미디어법 논문을 대상으로 미디어법 연구동향을 파악했는데, 분석 결과 가장 활발히 연구된 주제는 프라이버시(자기정보결정권,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포함)였다. 절반 이상의 연구가 법해석학 방법론을 사용하고 있었으나, 연구자의 속성과 연구방법 간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법학자는 법해석학적 접근을 언론학자는 법사회학적 접근을 주로 활용하는 경향이 확인됐다(김민정, 2017). 최영재(2021)는 한국 언론중재제도 연구 40년의 성과와 과제를 탐색하기 위해 <언론중재> 및 <미디어와 인격권>에 게재된 400편의 논문과 학위논문 54편을 분석했다. 연구주제는 언론중재법 개정과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부침이 있었으며, 2000년대 이후 인터넷 미디어와 소셜미디어 관련 연구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최영재, 2021).

특정 학술지/전문지에 게재된 논문만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로는 이재진·박성순(2015)과 조연하(2019)가 있다. 이재진·박성순(2015)은 언론위가 발행하는 <언론중재>에 실린 학술적 성격의 논문 508편을 분석하여, 연구주제와 연구방법의 변화 양상을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연구주

제는 시대별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다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는데, 1980년대(도입기)에는 명예훼손 관련 개념 정립 및 판례 소개가 두드러졌고 1990년대에는 연구주제의 세분화와 방법론의 다양화가 이뤄졌으며 2000년대 이후에는 인터넷 보급 및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언론중재 관련 개념 정의의 변화, ADR(대안적 분쟁 해결) 제도, 잊혀질 권리 등 새로운 주제가 등장했다(이재진·박성순, 2015). 조연하(2019)는 1999~2018년 기간 동안 <한국언론학보>에 게재된 언론법제 연구 25편을 분석한 후, 연구방법은 법사회학적·법해석학적 접근이 주류를 이루었음을 밝혔고, 연구주제가 국내 사례에 편중되어 있다는 한계를 지적하였다.

지금까지 논의한 선행연구의 결과들을 종합하면, 국내 언론법 연구는 법해석학적 연구가 강세를 보이며, 법사회학적 접근은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연구자의 속성(전공 분야)에 따라 주로 활용하는 연구방법에 차이가 있었다. 주요 연구주제는 시기별로 차이를 보였고, 최근 연구들에서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프라이버시, 가짜뉴스, 혐오표현 등의 새로운 주제들의 약진이 나타났다.

한편, 선행연구 모두는 내용분석 방법을 통해 국내 언론법 연구동향을 분석했다. 또한, 텍스트 마이닝 기법의 일종인 토픽 모델링과 휴먼 코딩 분석을 결합한 최영재(2021)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휴먼 코딩 분석을 통해 이뤄졌다. 선행연구들에서 활용한 코딩 분석의 주요 항목은 연구주제, 연구방법, 연구자 속성 등이었고, 연구의 지역적 초점이나 연구대상이 된 미디어의 유형을 함께 살펴본 연구들도 있었다. 선행연구의 분석틀을 기반으로 설정한 본 연구의 분석틀은 제3장에서 설명한다.

Ⅲ.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 10년의 연구동향과 학문적 영향력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목적 및 제2장에서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도출했다.

- 연구문제 1. 〈미디어와 인격권〉 학술지에 지난 10년간 게재된 논문들은 어떤 연구주제, 연구대상(미디어 유형)을 중심으로 다루었으며, 이러한 연구 경향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 연구문제 2. 〈미디어와 인격권〉 논문들은 어떠한 연구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이러한 연구방법의 사용은 시간에 따라 어떤 변화를 보이며 연구주제와는 어떤 관련성을 가지는가?
- 연구문제 3. 〈미디어와 인격권〉 논문 저자들은 어떠한 전문성과 협업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연구자의 속성에 따라 연구주제나 연구방법 선택에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4. 〈미디어와 인격권〉의 학문적 영향력은 어떠하며, 피인용 지수와 타 학술지와의 인용관계를 통해 어떤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가?

2. 연구방법

가. 분석 대상 및 데이터 수집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창간호(제1권 제1호, 2015년 11월 발간)부터

연구 진행 시점 기준 가장 최신호(제10권 제3호, 2024년 12월 발간)까지 <미디어와 인격권>에 게재된 학술 논문 전체로 총 102편이다. 논문 전문은 언증위 사이트를 통해 얻었고, 학술지의 학문적 영향력 관련 지표 및 데이터는 한국학술지인용색인(Korea Citation Index, 이하 KCI) 사이트를 통해 얻었다. KCI는 인용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인용 데이터를 엑셀 파일 형태로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나. 내용분석: 휴먼 코딩

내용분석은 연구의 제목, 초록, 본문 등을 검토하여 연구자가 진행했다. 분석틀의 설정은 국내 언론법 연구동향을 분석한 선행연구를 참고로 연역적(deductive) 관점에서 시작한 후, 내용분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데이터를 토대로 항목을 추가하는 귀납적(inductive) 관점을 더해 내용분석 변수(variables) 및 각 변수별 속성(attributes)을 완성했다. 내용분석에 활용한 분석틀은 <표 1>과 같다.

<표 1> 내용분석 분석틀

변수(variables)	속성(attributes)
연구주제	①법적 체계의 이해(사법제도, 언론법체계, 언론법 사조, 제정사 등) ②표현의 자유와 기본권(언론/표현의 자유의 중요성, 헌법, 국가안보와 기밀, 사전억제, 가상표현) ③알 권리, 엑세스권, 정보공개청구 ④취재·보도의 자유와 책임(취재원 보호, 언론사 압수수색, 편집권 독립) ⑤선거표현(공직선거법), 재판, 범죄 보도(피의자 신상 공개) ⑥명에 훼손·모욕·혐오표현 ⑦프라이버시(사생활, 개인정보보호, 초상권, 성명권) ⑧반론권(정정·반론·추후보도) ⑨저작권(저작권, 지식재산권, 퍼블리시티권 등) ⑩성표현물(음란·저속, 가상 성표현물 등) ⑪미디어 규제 제도(내용심의, 자율규제 등) ⑫미디어 규제법(언론중재법 전반, 방송법 등) ⑬미디어 정책 ⑭미디어 윤리 ⑮광고규제 ⑯새로운 기술과 연계해 여러 주제 영역 개관 ⑰기타

연구 방법	법해석학 (전통적 연구)	①법 규정 중심 ②판례 중심(판례평석, 판례/사례분석 등-부분적 양적 통계도 포함) ③법 규정+판례분석
	법사회학 (사회과학 연구)	④양적방법(내용분석, 서베이, 실험연구 등) ⑤질적방법(심층인터뷰, FGI, 문화연구 담론분석 등) ⑥제도/정책연구
	그 외	⑦역사적 접근(법 제도와 법사상이 어떻게 생성·발전·소멸하였는지를 역사적, 사실적으로 분석, 파악, 전망) ⑧철학적·이론적 접근(법현상에 대해 도덕철학적으로 접근하거나 심리학 등 학술 이론을 적용해 논증) ⑨기타/복합
연구대상 미디어 유형	①신문/잡지 ②방송/통신 ③영화 ④인터넷(SNS, 모바일 등 온라인) ⑤ 복합 및 비매체(특정 매체로 국한되지 않거나 매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경우)	
논문 형태	①기획논문 ②연구논문 ③판례평석	
참여 연구자 수	(참여 연구자 숫자 기재)	
연구자 속성 (전문 분야)	①언론학자 ②법학자 ③언론실무 ④법실무(판사, 변호사)	

주: 이승선(2005); 이재진·이승선(2008); 이승선·이재진(2011); 이승선(2014); 이재진·박성순(2015); 김민정(2017); 조연하(2019) 참조.

다. 문헌계량학: 인용분석(citation analysis) 등

인용지수를 토대로 학술지의 학문적 영향력을 평가하는 지표에는 영향력지수(Impact Factor, 이하 IF), 중심성지수(SCImago Journal Rank, 이하 SJR), 통시적 학술지 영향력지수(Diachronous Journal Impact Factor, 이하 IMP), 즉시성지수(Immediacy Index), 피인용반감기(Cited half-life), FWCI(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등이 있다. 세계 양대 학술지 인용 데이터베이스인 클래리베이트(Clarivate Analytics)는 IF, IMP, 즉시성지수, 피인용반감기 수치 등을 제공하며, 엘스비어(Elsevier)는 FWCI 수치와 SJR 수치를 제공한다. KCI는 클래리베이트와 엘스비어에서 개발, 활용해 온 이러한 지표들을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적용해 KCI 인용지수를 제공한다. 본 연구는 KCI가 제공하는 KCI 인용지수들²⁾ 중 IF를

2) 각 인용지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한국연구재단이 제공하는 <KCI 인용지수 설명>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https://www.kci.go.kr/kciportal/po/citationindex/explanation.kci>).

활용한다. 다른 지수들은 학문 분야별 평균값을 제공하지 않아 수치의 의미를 해석하기 어렵고 또한 최근 몇 년의 수치만 제공하는 등 일관성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미디어와 인격권> 학술지 IF와 함께 타 학술지들과의 인용관계를 살폈고, 논문별 피인용 횟수 데이터를 다운로드하여 추가 분석을 진행했다.

IV. 연구결과

1. 연구된 주제 및 연구대상 미디어 유형

가. 전체 동향

지난 10년간 <미디어와 인격권>에 게재된 연구들이 빈번하게 다룬 상위 5개 주제는 1)명예훼손·모욕·혐오표현(이하, ‘명예훼손 등’으로 표기), 2)프라이버시(사생활, 개인정보보호, 초상권, 성명권), 3)새로운 기술과 연계해 여러 주제 영역 개관(이하, ‘신기술 연계 복합 주제’로 표기), 4) (공동4위)미디어 규제법(언론중재법 전반, 방송법 등), 5)(공동4위)‘기타’ 주제였다(〈표 2〉참조).

가장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진 두 분야는 명예훼손 등(16편)과 프라이버시(15편)다. 비율로는 15.7%(명예훼손 등)와 14.7%(프라이버시)로 둘을 합하면 전체의 약 1/3을 차지한다. 인격권 관련 대표 주제 영역인 명예훼손 등과 프라이버시가 그 중요도를 유지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프라이버시 관련 연구가 대표 연구주제라는 점은 데이터 경제 시대에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 간의 균형 문제, 사적 정보의 공개 범위, 잊힐 권리 등과 관련한 법적 쟁점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세 번째로 많이 다뤄진 연구주제는 신기술 연계 복합 주제였다. 이들

연구는 인터넷 플랫폼, 가상 인간, 인공지능, 드론 등이 제기하는 다양한 법적 이슈들을 여러 분야에 걸쳐 개관, 논의한 것으로 12편(11.8%)이었다. 독자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쟁자면, 이 주제로 분류된 연구들만이 새로운 기술과 연계해 제기되는 법적 이슈들을 다룬 것은 아니었다. <미디어와 인격권>에 게재된 다수의 논문이 새로운 기술과 연계해 제기되는 법적 이슈들을 다뤘는데, 본 연구에서는 가령 인공지능으로 인한 변화를 논의하면서도 저작권 영역에 국한해 논의를 진행한 연구는 ‘저작권’ 연구로 분류했고 인공지능으로 인한 변화를 여러 주제 영역에 걸쳐 논의를 진행한 연구는 ‘신기술 연계 복합 주제’ 연구로 분류했다. ‘신기술 연계 복합 주제’라는 항목은 내용분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귀납적(inductive)으로 추가할 필요가 생겼을 만큼 빈번하게 나타났다. 이는 기획논문 대주제의 영향(다음 절의 논의 참고)이 일정 정도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지만, 새로운 기술 환경이 인격권과 법제 연구에서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전통적인 법적 규제 방식이 디지털 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가운데, 기술이 야기하는 새로운 법적 문제를 한 편의 논문에서 다양한 주제 분야에 걸쳐 다층적 측면에서 다룬 연구들이 증가했음을 방증한다.

<표 2> 연구주제별 논문 수 (전체, 2015년~2024년)

순위	연구주제	논문 수(%)
1	명예훼손·모욕·협오표현	16 (15.7%)
2	프라이버시(사생활, 개인정보보호, 초상권, 성명권)	15 (14.7%)
3	새로운 기술과 연계해 여러 주제 영역 개관	12 (11.8%)
공동4	미디어 규제법(언론중재법 전반, 방송법 등)	11 (10.8%)
공동4	기타	11 (10.8%)
6	선거표현(공직선거법), 재판, 범죄 보도(피의자 신상 공개)	9 (8.8%)
7	미디어 규제 제도(내용심의, 자율규제 등)	7 (6.9%)
공동8	저작권(저작권인격권, 부정경쟁방지법, 퍼블리시티권 등)	6 (5.9%)
공동8	표현의 자유와 기본권(언론/표현 자유의 중요성, 헌법 등)	6 (5.9%)
10	반론권(정정·반론·추후보도)	3 (2.9%)
11	미디어 윤리	2 (2.0%)

공동12	취재 보도의 자유와 책임(취재원 보호, 언론사 압수수색, 편집권 독립)	1 (1.0%)
공동12	알 권리, 액세스권, 정보공개청구	1 (1.0%)
공동12	성 표현물	1 (1.0%)
공동12	광고 규제	1 (1.0%)
(합계)		102 (100%)

상위 5개 주제의 연도별 변화를 보면, 명예훼손 등을 주제로 한 연구와 프라이버시를 주제로 한 연구의 경우, 평소보다 관심이 높아지는 연도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대체로 모든 연도에서 해당 주제를 다룬 논문 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형태였다. 두 주제가 그 중요도를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미디어 규제법을 다룬 연구와 기타 주제를 다룬 연구는 특정 연도에 논문 수가 급증했는데 이는 해당 연도의 기획연구 대주제와의 관련성 때문으로 보인다. 가령, 미디어 규제법을 다룬 연구는 총 11편이 있었는데, 이 중 4편이 2021년에 발간되었다. 이는 2021년도 기획논문 대주제 3개 중 2개가 ‘언론중재위원회 사회적 기능과 언론중재제도에 대한 검토’와 ‘언론중재제도 POST 40’였다는 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미디어와 인격권>에서 설정한 기획논문 대주제는 개별 논문의 연구주제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므로, 다음 절에서는 기획논문 대주제를 고려해 연구주제의 동향을 짚는다.

나. 기획논문 대주제를 고려한 동향

<미디어와 인격권>은 창간호부터 지금까지 매 호 대주제에 따른 기획 논문을 공모해 오고 있다. 분석 대상 논문 102편 중 기획논문에 해당하는 것은 58편으로 전체 논문의 약 57%를 차지했다. 이 외에 연구논문 38편(37.3%)과 판례평석 6편(5.9%)이 발간되었다. <표 3>은 총 22개의 기획논문 대주제를 학술지 발간 연도순으로 정리한 것이다.

〈표 3〉 기획논문 대주제 (2015년~2024년)

년도	권	호	기획논문 대주제
2015	1	1	‘디지털 시대의 인격권 보호’ (학술지에 명시 안 됨, 2편의 기획 논문 주제로 추정하면 ‘디지털 시대의 인격권 보호’ 정도로 요약 가능함)
2016	2	1	초연결사회와 인격권
2017	3	1	뉴스 플랫폼 다변화와 인격권 보호
2017	3	2	기술주도 미디어 시대와 인격권
2018	4	1	현 미디어 법제 진단과 개선방안
2018	4	2	디지털 시대, ‘표현의 자유’에 관한 다면적 접근
2019	5	1	혐오표현과 사회적 갈등 그리고 미디어 역할
2019	5	2	탈진실 시대의 페이크뉴스(또는 허위조작정보·디스인포메이션)와 팩트체크, 그리고 인격권
2020	6	1	데이터 시대, 저널리즘 그리고 인격권
2020	6	2	디지털시대 ‘알권리’와 ‘인격권’의 충돌, 무엇이 문제인가
2021	7	1	언론중재위원회 사회적 기능과 언론중재제도에 대한 검토
2021	7	2	명예훼손과 피해구제
2021	7	3	언론중재제도 POST 40
2022	8	1	유튜브(YouTube)의 자유와 한계
2022	8	2	선거와 언론
2022	8	3	초상권과 피해구제
2023	9	1	미디어 윤리와 인격권
2023	9	2	AI와 인격권
2023	9	3	온라인 상 극단적 표현(경계적 표현)의 자유와 한계, 그리고 피해구제
2024	10	1	미디어 내용 규제와 표현의 자유
2024	10	2	디지털 심화 시대의 저널리즘과 인격권
2024	10	3	다변화된 미디어 플랫폼의 현실과 쟁점

기획논문 대주제들은 새로운 뉴스 플랫폼의 개념 정립,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간의 균형 유지, 제도적 수용 방안 등 언중위가 표방하고 있는 〈미디어와 인격권〉 발간 목적을 잘 반영하고 있다. 다만, 비판적 시각에서 보면 다음과 같은 평가가 가능하다. 첫째, 많은 대주제가 지나치게 일반적이거나 추상적이다. 이로 인해 대주제의 명확한 방향성을 알기 어렵다. 달리 말해, 기획논문이 광범위한 범위에서 이론적, 개념적 논의를 반복할 경우 기존 연구들과의 차별성이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 둘째, 새

로운 뉴스 플랫폼의 특수성을 논의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는 기술 분야 연구와의 학제 간 융합을 고려한 대주제가 부족하다.

기획논문을 제외한 일반논문—연구논문 38편과 판례평석 6편—이 다른 연구주제별 논문 수와 비율은 <표 4>와 같다. 전체 논문을 대상으로 파악한 연구주제별 논문 수에 따른 순위(<표 2> 참조)와 비교해 보면, 명예훼손 등과 프라이버시는 양쪽 모두에서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양쪽을 비교할 때 순위에서 다소 차이를 보이는 연구주제들도 있다. 대표적으로 저작권을 주제로 한 연구는 전체논문에서는 8위였으나 일반논문으로 한정하면 2위로 올라섰다. 미디어 규제법, 표현의 자유와 기본권, 미디어 규제 제도도 일반논문에 한정해 분석했을 때 그 순위가 올라간 주제들이다. 저작권을 주제로 한 연구는 이승선·이재진(2011)의 연구에서 국내 언론법 분야의 주요 연구주제로 파악된 바 있고, 표현의 자유와 기본권, 미디어 규제법, 미디어 규제 제도를 주제로 한 연구도 이승선(2014)의 연구에서 주요 연구주제로 파악된 바 있다. 즉, 기획논문을 제외하면 <미디어와 인격권>에 발간된 논문들의 연구주제는 선행연구들이 밝힌 국내 언론법 연구주제와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한편, 신기술 연계 복합 주제를 다룬 연구는 전체 논문을 대상으로 파악했을 때는 3위였으나 일반논문에 한정해 분석하면 9위로 떨어졌다. 이는 기획논문 대주제들이 ‘디지털 시대’, ‘뉴스 플랫폼 다변화’ ‘기술 주도 미디어’, ‘AI’ 등을 화두로 했다는 점에서 기인한 차이로 보인다.

<표 4> 연구주제별 논문 수 (기획논문 제외, 2015년~2024년)

순위	연구주제	논문 수(%)
1	명예훼손, 모욕, 혐오표현	8 (18.2%)
공동2	프라이버시(사생활, 개인정보보호, 초상권, 성명권)	5 (11.4%)
공동2	저작권(저작권인격권, 부정경쟁방지법, 퍼블리시티권 등)	5 (11.4%)
공동2	미디어 규제법(언론중재법 전반, 방송법 등)	5 (11.4%)
공동5	표현의 자유와 기본권(언론/표현 자유의 중요성, 헌법 등)	4 (9.1%)
공동5	미디어 규제 제도(내용심의, 자율규제 등)	4 (9.1%)
공동5	기타	4 (9.1%)

8	선거표현(공직선거법), 재판, 범죄 보도(피의자 신상 공개)	3 (6.8%)
공동9	반론권(정정·반론·추후보도)	2 (4.5%)
공동9	새로운 기술과 연계해 여러 주제 영역 개관	2 (4.5%)
공동11	취재 보도의 자유와 책임(취재원 보호, 언론사 압수수색, 편집권 독립)	1 (2.3%)
공동11	미디어 윤리	1 (2.3%)
(합계)		44 (100%)

다. 연구대상 미디어 유형

지난 10년간 <미디어와 인격권>에 게재된 논문들이 연구대상으로 삼은 미디어 유형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연구가 이뤄진 대상은 ‘복합 및 비매체’였다. 즉, 61편(59.8%)의 연구는 해당 논문에서 다루는 연구대상 매체가 하나의 특정 매체로 명확히 한정되지 않거나, 혹은 매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경우였다. 부연하면, 본 연구에서 ‘복합 및 비매체’로 설정한 범주는 두 가지 하위 유형을 포함한다. 하나는 논문에서 여러 매체 유형(예: 방송, 인터넷 등)을 동시에 다루거나 비교하면서 특정 매체 하나만을 중심으로 분석하지 않는 경우로 ‘복합 매체’에 해당하는 경우다. 다른 하나는 ‘비매체(non-media)’로 인격권 일반, 이론적 논의 등 논문이 미디어를 직접적으로 분석 대상으로 삼지 않거나 미디어와 간접적으로만 관련된 주제를 다루는 경우다. 본 연구에서 ‘복합 및 비매체’로 분류한 연구의 예시를 몇 가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재산권 개념의 사상적, 경제적, 법적 측면을 논의한 논문, ② ‘현저한 상당성’ 법리 등 공적 사안에 대한 대법원 법리를 검토한 논문, ③ ‘중복’ 관련 판례를 분석한 논문, ④ 매체물 심의제도 개선 방향에 관한 논문 등.

‘복합 및 비매체’ 다음으로 가장 많은 연구가 이뤄진 대상은 ‘인터넷’이었다. 총 33편(32.4%)의 논문이 인터넷(SNS, 모바일 등 온라인)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이외에 ‘방송/통신’을 다룬 연구가 7편(6.9%), ‘신문/잡지’를 다룬 연구가 1편(1.0%)이었다.

기획논문 대주제가 연구자들의 연구대상 미디어 유형 선택에 일정의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기획논문을 제외하고 일반논문만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대상 미디어 유형을 추가로 살폈다. 그 결과, 여전히 ‘복합 및 비매체’를 다룬 연구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 44편의 일반논문 중 30편(68.2%)이 ‘복합 및 비매체’를 연구대상으로 한 연구였다. 그다음은 ‘인터넷’을 다룬 연구로 9편(20.5%)이었고, ‘방송/통신’을 다룬 연구는 5편(11.4%)이었다. 즉, 비율에 있어 다소 차이는 있었으나, 논문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하든, 기획논문을 제외하고 분석하든 연구자들이 중점적으로 연구한 미디어는 ‘복합 및 비매체’와 ‘인터넷’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시간의 흐름에 따른 연구대상 미디어 유형 변화의 뚜렷한 경향성은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지면 관계상 추가 논의는 생략한다.

2. 활용된 연구방법

지난 10년간 <미디어와 인격권>에 게재된 연구들이 빈번하게 활용한 상위 3개 연구방법은 모두 법해석학적 접근이었다. 1위는 법 규정 중심의 법해석학 연구로 25편(24.5%)이었고, 2위는 판례 중심의 법해석학 연구로 22편(21.6%)이었으며, 3위는 법 규정과 판례분석을 동시에 진행한 법해석학 연구로 19편(18.6%)이었다. 즉, 102편의 약 65%에 해당하는 66편의 연구들이 법해석학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법사회학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양적방법을 택한 연구가 11편, 질적방법을 택한 연구가 6편으로 총 17편, 즉 전체의 약 17%가량의 연구가 법사회학적 접근을 취한 연구였다.

법해석학 연구는 법률 텍스트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만큼, 이러한 연구 결과는 <미디어와 인격권>에서 실제 사회에서 법이 미치는 영향이나 미디어 환경 변화 속에서 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실증 연구, 법과 사회의 관계를 분석하는 실증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인격권 보호 조치(명예훼손 피해 구제, 기사 삭제 요청

등)가 실제로 피해자들에게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관한 연구나, 시민들이 미디어 규제법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증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표 5〉 연구방법별 논문 수 (전체, 2015년~2024년)

순위	연구방법	논문 수 (%)
1	법해석학(법 규정 중심)	25 (24.5%)
2	법해석학(판례 중심)	22 (21.6%)
3	법해석학(법 규정+판례분석)	19 (18.6%)
공동4	기타/복합	11 (10.8%)
공동4	법사회학(양적방법)	11 (10.8%)
6	법사회학(질적방법)	6 (5.9%)
공동7	역사적 접근	4 (3.9%)
공동7	철학적·이론적 접근	4 (3.9%)
(합계)		102 (100%)

빈번하게 활용된 상위 5개 연구방법의 연도별 변화를 살펴보면, 법 규정 중심의 법해석학 연구방법은 2015년부터 꾸준히 활용되어 왔다. 특히 2018년에 가장 많은 논문이 발표되었고, 그 외 연도에도 매년 2편에서 3편 사이의 논문이 안정적으로 발표되었다. 판례 중심의 법해석학 연구 역시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나타났으며, 2019년과 2022년에 각각 4편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한편, 법 규정과 판례를 함께 분석한 법해석학 연구는 초기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수를 보였으나, 2019년 이후 증가세를 나타내며 2024년에는 5편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끝으로, 법사회학 접근 중 양적방법을 활용한 연구와 기타/복합적인 연구방법을 적용한 연구는 특정 시기에 일시적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등 연도별 변동성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10년이라는 분석 기간을 고려할 때, 해당 연구방법을 활용한 논문의 수 자체가 적어 이러한 변동성에서 뚜렷한 추세나 유의미한 해석을 도출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연구주제와 연구방법 간의 상관관계, 즉 특정 연구주제에서 특정 연구방법론이 더 자주 사용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했다. 명예훼손 등을 주제로 한 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연구방법은 판례 중심의 법해석학이었고, 기타 연구주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연구방법은 양적방법을 활용한 법사회학적 접근이었다. 이처럼 연구주제 별로 특정 연구방법이 선호되는 경향도 발견되었지만, 교차분석에서 각 셀(cell)의 빈도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는 도출할 수 없었다.

3. 연구자 속성 및 협업

가. 참여 연구자 수

지난 10년간 <미디어와 인격권>에 게재된 연구의 절대다수는 단독연구였다. 총 102편 중 88편의 연구는 1인 저자에 의한 단독연구로 비율로는 86.3%에 달한다. 2인 공동연구는 14편이었고, 3인 이상의 공동연구는 한 편도 없었다. 총 14편의 공동연구 중 13편은 언론학자들 간의 공동연구였고 1편만이 법학자들 간의 공동연구였다. 언론학과 법학자가 함께 진행한 공동연구는 한 편도 없었다.

법학 연구는 전통적으로 단독연구 중심의 학문적 전통을 갖고 있다. 법률 조항 및 판례를 해석하고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개인 연구자 단위에서 수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를 고려할 때, <미디어와 인격권> 게재 논문의 86.3%가 단독 저술이라는 점은 일견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14편의 공동연구가 같은 전공 분야 내에서만 이뤄졌다는 것은 연구자들이 학문적 장벽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아울러, 언론법 연구의 본질이 법학과 언론학 간의 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학문 간 교류와 협업이 부족한 것은 중요한 한계이다.

나. 연구자의 전문 분야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를 전문 분야에 기반해 크게 4가지로 나눴다: ①언론학자(언론학 교수, 언론학 전공 대학원생, 언론학 관련 연구소 연구원, 언론학 박사 학위를 소지한 자 등) ②법학자(법학 교수, 법학 전공 대학원생, 법학 관련 연구소 연구원, 법학 박사 학위를 소지한 자 등) ③언론 실무 전문가(기자 등) ④법 실무 전문가(판사, 변호사 등). 논문 제1저자의 전공 분야에 따른 논문 수를 분석한 결과, 언론학자에 의한 연구가 47편(46.1%), 법학자에 의한 연구가 46편(44.1%)으로 비슷했다. 판사, 변호사 등 법 실무 전문가에 의한 연구는 9편(8.8%)이었고, 기자 등 언론 실무 전문가에 의한 연구는 한 편도 없었다.

연구자의 전문 분야를 크게 언론학(언론학자 및 언론 실무 전문가)과 법학(법학자 및 법 실무 전문가)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언론학 전문가에 의한 연구 47편(46.1%) vs. 법학 전문가에 의한 연구 55편(53.9%)으로 법학 전문가들에 의한 연구의 비율이 7.8%포인트 높았다. 공동연구가 이뤄진 14편의 연구에서 제2저자의 유형은 언론학자가 13명이었고 법학자가 1명이었다. 따라서 102편의 연구에 참여한 총 116인의 연구자를 기준으로 하면 언론학 전문가가 60명으로 전체의 51.7%를 차지한다.

다. 연구자의 전문 분야에 따른 연구주제 및 연구방법 선택

연구자의 전문 분야를 크게 언론학과 법학으로 나눈 후, 연구주제 및 연구방법 선택에 있어 차이가 있었는지 분석했다. 통계적 유의미성을 담보하기 위해 교차분석 대상 데이터는 논문 빈도수 기준 상위 5개의 연구주제와 상위 5개 연구방법으로 제한했다.

우선, 연구주제 선택을 보면, 연구자의 전문 분야(언론학 vs. 법학)에 따라 연구주제 선택에 명확한 차이가 나타났다(〈표 6〉 참조). 언론학자들은 미디어 규제법(23.3%)과 기타(33.3%)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선택

하고 있는 반면, 법학 배경의 연구자들은 프라이버시(37.1%)와 신기술 연계 복합 주제(22.9%)를 더 많이 연구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양쪽 연구자 모두가 집중한 주제는 명예훼손 등이었다.

<표 6> 교차분석: 연구자의 전문 분야 x 연구주제

연구자 전문 분야	연구주제	명예훼손 등	프라이버시	미디어 규제법	신기술 연계 복합주제	기타
언론학		7 (23.3%)	2 (6.7%)	7 (23.3%)	4 (13.3%)	10 (33.3%)
법학		9 (25.7%)	13 (37.1%)	4 (11.4%)	8 (22.9%)	1 (2.9%)

($\chi^2 = 17.55, df=4, p < .01$)

다음으로, 연구자의 전문 분야(언론학 vs. 법학)에 따라 연구방법 선택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폈다. <표 7>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연구자의 전문 분야는 연구방법 선택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교차분석 결과, 언론학자들이 가장 빈번하게 활용한 방법은 양적 방법(내용분석, 서베이, 실험연구 등)으로 나타난 반면, 법학 전문가들은 법 규정 중심의 법해석학 연구(38.0%)와 판례 중심의 법해석학 연구(30.0%)를 주로 진행했다는 차이가 있었다.

<표 7> 교차분석: 연구자의 전문 분야 x 연구방법

연구자 전문 분야	연구방법	법해석학 (법규정 중심)	법해석학 (판례 중심)	법해석학 (법규정+ 판례)	법사회학 (양적방법론)	기타/ 복합
언론학		6 (15.8%)	7 (18.4%)	8 (21.1%)	11 (28.9%)	6 (15.8%)
법학		19 (38.0%)	15 (30.0%)	11 (22.0%)	0 (0.0%)	5 (10.0%)

($\chi^2 = 19.97, df=4, p < .01$)

4. 학술지의 학문적 영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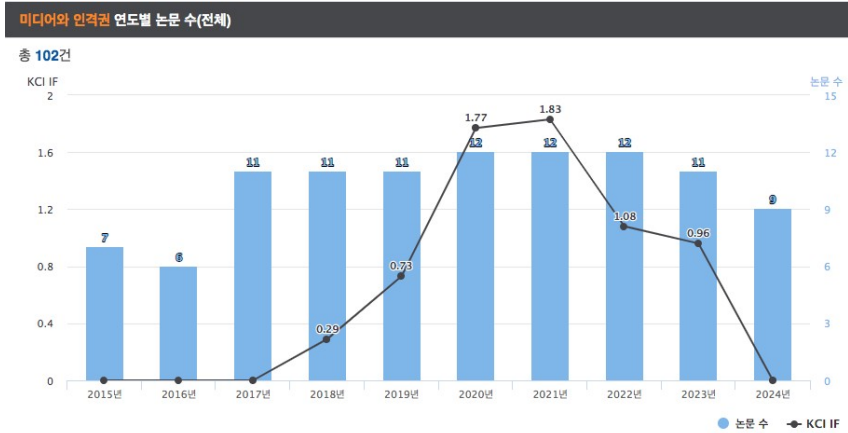
가. 피인용 횟수 및 저널 영향력지수

〈미디어와 인격권〉 학술지의 학문적 영향력을 피인용 횟수와 저널 영향력지수(Impact Factor: 이하 IF)에 기반하여 살펴본다. 우선, 피인용 횟수는 고정값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증가하며 변하기 마련이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KCI 인용보고서 데이터 셋(data set)을 2025년 2월 13일에 다운로드했을 때는 총 피인용 횟수가 425회였으나 약 2주 후에는 총 피인용 횟수가 21회 증가해 있었다. 지난 10년간 〈미디어와 인격권〉에 게재된 102편 논문들의 총 피인용 횟수는 2025년 2월 26일 기준 446회이고 자기인용(self-citation) 제외 시 384회이다.

총 피인용 횟수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편수에 영향을 받기 마련이므로, 총 피인용 횟수 자체만으로는 특정 학술지 게재 논문이 타 학술지 게재 논문보다 더 많이 혹은 더 적게 인용된 것인지 파악하기 어렵고 연도별 비교도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인용지수가 저널 IF다. 저널 IF는 특정 기간 동안 한 학술지에 수록된 하나의 논문이 피인용된 평균 횟수로 동일 분야 저널의 상대적 중요성을 비교 평가할 수 있도록 해 준다. KCI가 제공하는 저널 IF는 매년 7월 말일에 계산되며 직전 연도까지 2년간의 평균을 반영한다.

가장 최근 계산/제공되는 KCI IF는 ‘2023년도 IF(계산일: 2024년 7월 31)’로 〈미디어와 인격권〉의 경우 0.96이다. 이는 해당 학술지가 속한 신문방송학 분야의 평균 KCI IF(2023년도 기준 1.91)보다 낮은 수치이며, 법학 분야(1.14)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이다. 연도별 〈미디어와 인격권〉에 발간된 논문의 숫자와 연도별 KCI IF 수치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에서 2024년의 IF가 0으로 나타난 것은 KCI IF가 계산되기 이전이기 때문이다. 학술지 발간 초기에는 피인용이 거의 일어나지 않다가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학술지가 된 이후 저널 IF가 점차 증가해, 등재

학술지가 된 2020년(1.77)과 그다음 해인 2021년(1.83)에 KCI IF 수치가 가장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이후 KCI IF는 하락세를 보인다.



[그림 1] 연도별 논문 수와 KCI IF 지수 (2015년~2024년)

나. 논문별 피인용

<미디어와 인격권>에 게재된 102편 논문들의 총 피인용 횟수는 2025년 2월 26일 기준 446회로 논문별 평균 피인용 횟수는 4.37회다. 피인용 횟수 분포를 살펴보면, 표준편차는 5.03으로 분포가 넓게 퍼져있고, 중앙값은 3회로 전체 논문 중 절반은 3회 이하의 인용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최댓값은 29회로 일부 논문이 매우 높은 피인용 횟수를 기록하며 전체 평균을 높이고 있었다. 이처럼 소수의 논문이 큰 영향을 미치는 롱테일(long-tail) 패턴은 학술 논문 피인용 횟수 분포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분포다.

논문이 다룬 연구주체에 따라 피인용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연구주체별 피인용 횟수를 두 가지 방식으로 분석했다. 먼저, 연구주체별 평균 피인용 횟수를 확인했다. 다만, 특정 연구주체를 다룬 논문

수가 적을 경우, 평균값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논문 수 기준 상위 5개 연구주제에 한정하여 평균값은 분석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명예훼손 등(16편, 평균 4.88회), 2) 프라이버시(15편, 평균 4.13회), 3) 신기술 연계 복합 주제(12편, 평균 3회), 4) (공동4위) 미디어 규제법(11편, 평균 3.73회), 5) (공동4위) 기타 주제(11편, 평균 6.73회). 이들 수치를 보면, 연구주제별 평균 피인용 횟수에서 뚜렷한 경향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으로, 논문 발간 연도에 따라 인용 누적 시간이 달라지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조정 평균 피인용지수’를 산출했다. 이는 동일한 발간 연도 내에서 해당 논문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더 (혹은 덜) 인용되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예를 들어, 특정 연구주제의 ‘조정 평균 피인용지수’가 2.0이라는 것은, 해당 주제의 논문들이 같은 연도에 출판된 논문들보다 평균적으로 두 배 더 많이 인용되었음을 의미한다. 전술한 것과 동일한 이유로 상위 5개 연구주제에 한정해 ‘조정 평균 피인용지수’ 값을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1) 명예훼손 등(0.91), 2) 프라이버시(0.83), 3) 신기술 연계 복합 주제(1.12), 4) (공동4위) 미디어 규제법(0.96), 5) (공동4위) 기타 주제(0.99).

즉, 시간 경과에 따른 인용 누적 효과를 제거하고 살펴본 결과, 신기술 연계 복합 주제의 ‘조정 평균 피인용지수’가 1.12로 동일 발간 연도 게재 논문보다 약간 더 자주 인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 차이가 크지는 않고 나머지 주제들의 ‘조정 평균 피인용지수’에서 파악할 수 있는 뚜렷한 경향성은 없다. 따라서, 연구주제에 따라 피인용 정도에 차이가 있다는 명확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전체적으로 연구주제에 따른 피인용지수의 차이는 크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피인용 횟수 기준 상위 10개 논문의 목록은 <표 8>과 같다. 가짜뉴스(fake news) 관련 연구가 가장 높은 피인용 횟수를 기록해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디지털 리터러시(3위), 성별 갈등 보도 분석(4위)과 같이 전통적인 언론법 연구주제와는 거리가 있는 주제를 다룬 연구들도

피인용 횟수 기준으로는 최상위권에 있었다. 또한, 상위 10개 논문을 기준으로 보면, 언론학자들에 의한 연구가 법학자들이 진행한 연구보다 빈번하게 인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8> 피인용 횟수 기준 상위 10개 논문(피인용 횟수 기준 시점: 2025년 2월 26일)

순위	년도	권(호)	논문명	저자	피인용 횟수
1	2019	5(2)	가짜뉴스(fake news)에서 허위조작정보(disinformation)로	김민정	29
2	2018	4(2)	가짜뉴스(fake news)란 무엇인가? - 가짜뉴스 개념과 범위에 대한 다차원적 논의 -	이완수	24
3	2017	3(2)	인격권 보호를 위한 디지털 시민성 함양 :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양정애	16
4	2019	5(1)	미투 운동 이후 한국 신문에 나타난 성별 갈등 보도 분석	김수아	15
공동5	2017	3(1)	범죄수사 관련 보도자료 기사화(일명 ‘수사기관 처널리즘’)의 법적 문제점	양재규	13
공동5	2018	4(1)	정보기본권 신설 동향과 지향 - 새로운 미디어 환경을 헌법은 어떻게 수용하여야 하는가? -	정필운	13
7	2018	4(2)	현행법상 혐오표현의 규제, 특히 명예에 관한 죄 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최란	12
공동8	2018	4(2)	디지털 플랫폼에 의한 ‘사적 검열(private censorship)’	홍남희	11
공동8	2019	5(1)	혐오표현 규제와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윤성욱	11
공동10	2021	7(1)	한국 언론중재제도 40년의 도전과 성과 - 국회 법률안을 중심으로 -	이승선	10
공동10	2021	7(1)	디지털 시대 피해구제수단으로서 기사삭제 및 열람차단에 관한 연구	박아란 / 김현석	10

다. 학술지 간 인용관계

KCI에서 제공하는 ‘인용색인상제’를 통해 <미디어와 인격권>에서 많이 인용한 학술지와 <미디어와 인격권>을 많이 인용한 학술지를 추가로

파악할 수 있었다. <미디어와 인격권>에서 가장 많이 인용한 학술지는 <언론과 법>으로 총 133회 인용, 비율로는 10.8%였다. 이는 신문방송학과 법학의 접점에 있는 학술지인 <미디어와 인격권>이 유사한 성격의 학술지인 <언론과 법>을 핵심 참조 저널로 삼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디어와 인격권> 자체도 3위(4.7%)로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해당 학술지에 투고하는 연구자들이 <미디어와 인격권>에 실린 기존 연구를 적극적으로 참고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미디어와 인격권>이 많이 인용한 상위 10개 학술지 가운데 신문방송학 분야 저널과 법학 분야 저널이 거의 반반씩 분포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표 9〉 참조). 신문방송학과 법학이 모두 <미디어와 인격권>의 중요한 연구 기반이며 해당 학술지가 융합 학문 성격을 띠는 점을 보여준다. 달리 말해, 해당 학술지가 하나의 분야에 고립된 채 연구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언론학과 법학이라는 서로 다른 학문 분과 사이의 학제적 접점에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구조적 단서로 해석할 수 있다. 더 구체적으로는, 법학 저널 중에서도 공법 관련 학술지, 특히 <공법학연구>와 <공법연구>가 많이 인용되고 있는 것은 <미디어와 인격권>이 개인의 권리 보호(헌법)와 공적 규제(공법)라는 맥락에서 연구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인용비율 측면에서도 특이점이 있다. 최고 인용률(10.8%)을 기록한 <언론과 법> 외에는 대부분의 저널이 5% 미만의 인용률을 보인다. 이는 특정 학술지에 편중되기보다는 다양한 분야의 연구 성과를 참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미디어와 인격권>이 비교적 다양한 학문적 기반 위에서 구성되고 있으며, 아직 학문적 중심을 고정하기보다는 유동적이고 개방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을 나타낸다.

<표 9> <미디어와 인격권>이 인용한 횟수 기준 상위 10개 학술지
(인용 횟수 기준 시점: 2025년 2월 26일)

순위	학술지명	주제분류	인용비율(%)	인용횟수(건)
1	언론과 법	신문방송학	10.8	133 / 1,218
2	한국언론학보	신문방송학	5.1	62 / 1,218
3	미디어와 인격권	신문방송학	4.7	58 / 1,218
4	공법학연구	법학	3.5	43 / 1,218
5	한국방송학보	신문방송학	3.1	41 / 1,218
6	공법연구	법학	3.1	35 / 1,218
7	저스티스	법학	2.5	29 / 1,218
8	한국언론정보학보	신문방송학	2.1	26 / 1,218
9	세계헌법연구	법학	1.9	23 / 1,218
10	헌법학연구	법학	1.8	21 / 1,218

다음으로 <미디어와 인격권>을 많이 인용한 학술지들을 살펴보면, 이 학술지가 스스로를 인용한 비율이 13.9%로 가장 높았다(<표 10> 참조). 이러한 높은 자기 인용비율은 해당 학술지가 지속적인 연구 흐름을 내부적으로 구축하고 있으며, 학술지 고유의 문제의식과 정체성을 형성해 가고 있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높은 자기 인용비율은 신생 학술지들의 일반적 특징이기도 하다. 다만 자기 인용비율이 과도할 경우 학술지의 영향력이 특정 집단 내부에 머무를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향후 외부 인용 확장 여부를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다.

<미디어와 인격권>을 많이 인용한 상위 10개 학술지 중 6개가 신문방송학 분야 학술지이고, 특히 상위권에 더 많이 포진해 있다는 점은 미디어 연구자들이 이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들을 적극적으로 참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미디어, 젠더 & 문화>나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와 같은 디지털 콘텐츠 산업, 젠더 이슈, 온라인 문화 등을 다루는 저널들 역시 <미디어와 인격권>을 참조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이 학술지가 전통적인 언론학·법학 범주를 넘어서 디지털 시대의 인격권 문제를 다학제적으로 조명하는 연구 플랫폼으로서의 확장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0〉 〈미디어와 인격권〉 피인용 횟수 기준 상위 10개 학술지
(피인용 횟수 기준 시점: 2025년 2월 26일)

순위	학술지명	주제분류	인용비율(%)	피인용 횟수(건)
1	미디어와 인격권	신문방송학	13.9	62 / 446
2	언론과 법	신문방송학	6.3	28 / 446
3	한국언론정보학보	신문방송학	4.7	21 / 446
4	미디어, 젠더 & 문화	신문방송학	3.1	14 / 446
5	헌법학연구	법학	2.7	12 / 446
6	공법학연구	법학	2.2	10 / 446
7	언론정보연구	신문방송학	1.8	8 / 446
8	한국언론학보	신문방송학	1.6	7 / 446
9	공법연구	법학	1.6	7 / 446
10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학제간연구	1.6	7 / 446

이처럼 학술지 간 인용관계 분석은 단순히 인용 빈도를 파악하는 것을 넘어, 〈미디어와 인격권〉이 어떤 학문 분야와 주제 영역에서 활발히 참조되고 있으며, 또한 자체적으로 어떤 학문적 기반 위에서 연구가 전개되고 있는지를 가시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특히 신생 학술지의 경우, 자주 인용되는 외부 저널과 내부 자기 인용비율, 그리고 인용되는 저널군의 학문적 스펙트럼을 분석함으로써 해당 학술지의 정체성, 주요 독자층, 학문적 확산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분석은 학술지 편집 전략 수립, 연구자군 확장, 타 학문 분야와의 협업 가능성 탐색 등에도 실질적인 시사점을 제공한다.

V. 결론

본 연구는 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의 지난 10년간 연구동향과 학문적 영향력을 분석하여 해당 학술지가 언론법 연구에 기여한 바를 종합

적으로 고찰했다. 연구 결과, 명예훼손·모욕·협오표현, 프라이버시(사생활, 개인정보보호, 초상권, 성명권 등), 신기술 연계 복합 주제, 미디어 규제법(언론중재법 전반, 방송법 등), 기타 인격권 관련 주제 등이 주로 연구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연구대상 미디어 유형을 분석한 결과, 특정 매체에 국한되지 않은 ‘복합 및 비매체’(59.8%)를 연구대상으로 한 연구가 가장 많았고, 인터넷(SNS, 모바일 포함)을 연구대상으로 삼은 논문이 32.4%로 그 뒤를 이었다.

연구방법 측면에서는 법해석학적 접근(법 규정 중심, 판례 중심, 법 규정+판례분석)이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었다. 언론법 연구에서 법리적 분석이 핵심적 연구 방식임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법사회학적 접근(양적분석 및 질적분석)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는 연구방법의 다변성 확보가 향후 과제임을 시사한다.

연구자 간의 협업을 분석한 결과, 게재 논문의 절대다수가 단독연구(86.3%)로 이뤄졌고 2인 이상의 공동연구는 13.7%(14편)에 불과했다. 공동연구 총 14편 중 13편은 언론학자들 간의 협업이었고, 법학 연구자들 간의 협업 논문은 1편뿐이었다. 법학 연구자와 언론학 연구자가 공동연구한 경우는 단 한 편도 존재하지 않았다. 이는 <미디어와 인격권>이 언론법이라는 융합적 연구 분야를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연구에서는 학문 간 협업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연구자의 전문성(언론학 vs. 법학)에 따라 연구주제와 연구방법 선택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 언론학자들은 미디어 규제법 및 기타 주제를 더 선호하는 반면, 법학 전문가들은 프라이버시 및 신기술 연계 복합 주제를 더욱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경향이 있었다. 연구방법에서도 언론학자들은 양적연구방법(설문조사, 내용분석 등)을 선호한 반면, 법학 전문가들은 법 규정 중심의 법해석학적 접근을 주로 활용하고 있었다. 이는 연구자의 학문적 배경이 연구주제 선정과 연구방법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준다.

학문적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미디어와 인격권>의 2023년도 KCI IF

수치는 같은 해 신문방송학 분야 학술지 평균 KCI IF 및 법학 분야 학술지 평균 KCI IF보다 낮았다. 또한 <미디어와 인격권>의 2023년도 KCI IF는 2020년도와 2021년도의 IF에서 하락한 수치였다. 타 학술지의 인용관계를 살핀 결과, <미디어와 인격권>은 법학과 언론학의 교차점에서 연구의 장을 마련하며, 신문방송학과 법학의 대표 학술지들과 긴밀한 인용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자기 인용비율이 높고, 특정 연구들이 집중적으로 인용되는 경향이 나타났다는 점과 전술한 KCI IF 수치 하락은 <미디어와 인격권>이 외부 학계와의 학문적 교류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학술지가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몇 가지 제안한다. 첫째, 연구방법의 다변화가 필요하다. 지난 10년간 <미디어와 인격권>에 게재된 연구들에서는 법해석학적 접근이 절대적으로 우세한 반면, 법사회학적 연구(양적·질적연구)의 비율은 낮다. 데이터 기반의 실증 연구를 강화하고, 정성적 연구(심층 인터뷰, 담론 분석 등)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 학제 간 협업 활성화가 필요하다. 지난 10년간 <미디어와 인격권>에 게재된 연구 중 언론학자와 법학자가 함께 연구한 사례가 한 편도 없었다. 또한 기획논문 대주제를 보면, 기술 분야 연구와의 학제 간 융합을 유도하는 주제들이 부족했다. 날로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발생하는 인격권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학제적 접근이 필수적인 영역인 만큼, 법학과 언론학 연구자 간의 협업을 촉진하고 아울러 기술 분야 연구자들과의 협업도 유도할 수 있는 연구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학술지 차원에서 각기 다른 전문 분야에 속한 연구자 간 협업을 촉진하는 연구 공모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디지털 시대의 법적 쟁점에 관한 심화된 연구 역시 요구된다. <미디어와 인격권>은 “새로운 뉴스 플랫폼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수용해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장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간되는 학술지다. 빈번하게 연구된 주

제 분야(대표적으로, 신기술 연계 복합 주제) 및 피인용 횟수 기준 최상위 논문들이 다른 주제(대표적으로 가짜뉴스, 혐오표현, 플랫폼 등)에서 확인할 수 있듯, 디지털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법적 쟁점이 지속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이슈를 중심으로 보다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넷째, <미디어와 인격권>의 학문적 영향력 확대를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피인용 횟수가 높다는 것이 논문의 질이나 학술지의 영향력을 직접적으로 담보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리 좋은 논문/학술지라 해도 동료 연구자들에 의해 인용되지 않는다면 그 존재가 잊힐 수밖에 없다. 연구자들이 주목하는 주제를 적극적으로 다루고, 외부 학계와의 학문적 교류를 더욱 확대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술지의 국제적 영향력 확대를 위해서는 해외 학자들과의 협업, 글로벌 학술 네트워크 구축, 영문 논문 게재 추진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미디어와 인격권>에 게재된 논문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이는 해당 학술지의 연구동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데 유리한 접근법이지만, 한국 언론법 연구 전반의 흐름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미디어와 인격권>이 국내 언론법 연구의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둘째, 본 연구는 문헌계량학(bibliometrics)과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학술지의 연구 경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데는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개별 연구의 심층적인 질적 해석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논문별 연구성과의 질적 차이나 논문의 실제 정책적·사회적 영향력 등을 평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과 토픽 모델링(topic modeling) 기법을 활용한 정량적 분석이 포함되지 않았다. 최근 학문적 연구동향 분석에서 자연어처리(NLP) 기반의 텍스트 분석기법이 활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연구에서는 토픽 모델링을 적용하여 연구주제의 변화 양상을 보다 정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논문 저자의 전문 분야를 언론학과 법학으로 이분화하여 연구주제 및 연구방법 선택과의 관계를 분석했다. 그러나 실제 연구자들은 법학과 언론학을 동시에 연구하거나, 언론학 내에서도 저널리즘, 미디어 정책, 방송법 등 세부 전공이 다를 수 있다. 연구자의 세부 전공을 보다 정교하게 분류해 연구자들의 학문적 배경과 연구 성향을 분석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학술지의 영향력을 평가하기 위해 KCI(한국학술지인용색인)의 인용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그러나 학술지의 영향력을 단순히 피인용 횟수나 저널 영향력지수(IF)로만 평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논문의 실제 정책적·사회적 영향력, 즉 연구결과가 법 제정, 정책 변화, 공적 담론 형성 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향후 연구에서는 학술적 인용뿐만 아니라 정책보고서, 법원판결문, 정부 및 언론 보도에서 해당 연구가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조사하여 학문적·사회적 영향을 보다 폭넓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한계들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미디어와 인격권> 학술지가 지난 10년간 쌓아온 학문적 성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연구동향을 입체적으로 조망함으로써, 향후 연구방향과 발전 과제를 제시하는 데 기여했다는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미디어와 인격권>이 언론법 및 미디어 정책 연구에서 중요한 학문적 역할을 수행하며, 미디어 환경 변화 속에서 지속적인 학문적 논의를 이끌어나가기를 기대한다.

■ 참고 문헌

- 김민정 (2017). 미디어법의 연구동향.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17 봄철 정기학술대회, 방송이론의 변화 트랙 발제문, 2017.4.21.
- 김영환 (2014). 법학방법론의 이론적 체계와 실천적 의의. <법철학연구>, 17권 3호, 5-43.
- 상윤모, 박소영 (2023). 저널리즘 및 미디어·커뮤니케이션 분야 윤리 연구 동향 분석. <미디어와 인격권>, 9권 1호, 1-38.
- 오세혁 (2008). 우리나라 법학방법론의 전개. <법철학연구>, 11권 2호, 227-258.
- 이승선 (2005). 언론법제 연구의 현황과 특성. <커뮤니케이션 이론>, 1권 1호, 227-262.
- 이승선 (2014). 언론법제 연구의 최근 동향: 2011~2013년 학술논문을 중심으로. <언론과 법>, 13권 1호, 1-27.
- 이승선 (2018). '표현의 자유' 및 '인격권 보호'에 관한 최근 연구동향: 전문 학술지 및 학위논문 분석을 중심으로. <미디어와인격권>, 4권 2호, 87-134.
- 이승선·이재진 (2011). 언론법제 연구의 최근 동향 분석. <언론과 법>, 10권 1호, 153-188.
- 이재진·박성순 (2015). 언론법제 연구의 어제와 오늘: <언론중재>지 30년의 분석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이론>, 11권 3호, 213-260.
- 이재진·이승선 (2008). 언론법 연구의 최근 동향 분석. <언론과 법>, 7권 1호, 105-133.
- 조연하 (2019). 언론법제 연구의 동향과 과제. 한국언론학회(엮음). <한국 언론학 연구 60년 성과와 전망> (337-375쪽). 서울: 나남.
- 채이식 (2015). 법학 교육 및 연구 방법론에 관한 소고. <고려법학>, 76호, 1-26.
- Bhunia, S., & Singh, P. K. (2025). Producer organizations in the last 25 years: A bibliometric analysis and meta-review of the literatur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Communications*, 12. [DOI: <https://doi.org/10.1057/s41599-025-04526-3>]

- Blei, D. M., Ng, A. Y., & Jordan, M. I. (2003). Latent Dirichlet allocation. *Journal of Machine Learning Research*, 3, 993-1022.
- Borenstein, M., Hedges, L. V., Higgins, J. P. T., & Rothstein, H. R. (2011). *Introduction to Meta-Analysis*. Hoboken, NJ: John Wiley & Sons.
- Cohen, J. (1988).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2nd ed.).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Egger, M., Smith, G. D., Schneider, M., & Minder, C. (1997). Bias in meta-analysis detected by a simple, graphical test. *BMJ*, 315(7109), 629-634.
- Farzam, Z., Dhume Shinkre, P., Borde, N. and Hegde Desai, P. (2025). Exploring the interplay between foreign capital, institutional quality and financial development: a comprehensive bibliometric analysis and systematic review, *Managerial Finance*, 51(2), 321-336. [DOI: <https://doi.org/10.1108/MF-07-2024-0563>]
- Feldman, R., & Sanger, J. (2007). *The text mining handbook: Advanced approaches in analyzing unstructured data*.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arfield, E. (1979). *Citation indexing—Its theory and application in science, technology, and humanities*. Hoboken, NJ: John Wiley & Sons.
- Glass, G. V. (1976). Primary, secondary, and meta-analysis of research. *Educational Researcher*, 5(10), 3-8.
- Hedges, L. V., & Vevea, J. L. (1998). Fixed- and random-effects models in meta-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3(4), 486-504.
- Higgins, J. P. T., & Thompson, S. G. (2002). Quantifying heterogeneity in a meta-analysis. *Statistics in Medicine*, 21(11), 1539-1558.
- Krippendorff, K. (2004). *Content analysis: An introduction to its methodology*. Thousand Oaks, CA: Sage.
- Kuhn, T. S. (1962).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Neuendorf, K. A. (2017). *The content analysis guidebook*(2nd ed.) Thousand Oaks, CA: Sage.
- Newman, M. E. J. (2004). Coauthorship networks and patterns of scientific

- collaboration.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01(Suppl 1), 5200-5205.
- Pritchard, A. (1969). Statistical bibliography or bibliometrics? *Journal of Documentation*, 25(4), 348-349.
- Small, H. (1973). Co-citation in the scientific literature: A new measur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wo documents.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24(4), 265-269.
- Small, H., & Griffith, B. C. (1974). The structure of scientific literatures I: Identifying and graphing specialties. *Science Studies*, 4(1), 17-40
- Tranfield, D., Denyer, D., & Smart, P. (2003). Towards a methodology for developing evidence-informed management knowledge by means of systematic review. *British Journal of Management*, 14(3), 207-222.
- Van Raan, A. F. J. (2005). Measurement of central aspects of scientific research: Performance, interdisciplinarity, structure. *Measurement: Interdisciplinary Research and Perspectives*, 3(1), 1-19.
- Yadav, S., Koushik, K., & Kishor, N. (2024). The state of country-of-origin research: A bibliometric review of trends and future directions. *Asia Pacific Management Review*. [DOI: <https://doi.org/10.1016/j.apmr.2024.12.001>]

■ ABSTRACT

A Decade of Research in the *Journal of Media and Defamation Law*

- Trends and Academic Impact -

Kim, Minjeong

Ph.D., Professor, Division of Media and Communicatio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research trends and academic impact of the *Journal of Media and Defamation Law* over the past decade, shedding light on its evolving contributions to media law scholarship in South Korea. Since its launch in 2015, the journal has become a key platform for academic discussion on legal issues surrounding media practices. The study examines a total of 102 articles published in the journal from 2015 to 2024 and employs bibliometric analysis and content analysis as the primary research methods. The findings reveal that the most frequently studied topics include defamation, insult, and hate speech (15.7%); privacy (14.7%); multiple domain legal issues related to new technologie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AI) and digital platforms (11.8%); and media regulation laws (10.8%). These results suggest that legal issues arising from digital transformations continue to attract academic interest. From a methodological perspective, over 65% of the analyzed studies relied on a legal interpretative approach, focusing on statutory analysis and judicial precedents. Meanwhile, a notable disciplinary distinction was observed in research preferences:

media and communication scholars tend to favor media regulation topics and quantitative methodologies, while legal scholars focused more on privacy, technology-related issues, and legal interpretation. The analysis also revealed a low level of interdisciplinary collaboration. Only 13.7% of the studies were co-authored, and there were no instances of joint research between legal and media scholars. This suggests a critical lack of interdisciplinary engagement, which may limit the journal's potential to bridge the divide between legal theory and media practice. An analysis of the journal's academic impact shows that *Journal of Media and Defamation Law* maintains strong citation linkages with leading journals in both journalism and law, thereby confirming its crucial role in fostering interdisciplinary legal studies. However, the journal's impact factor has declined recently, and its high self-citation rate suggests limitations in the scope of its research dissemination. Moving forward, efforts should focus on expanding socio-legal approaches, strengthening interdisciplinary collaboration, deepening research on legal challenges in the digital era, and enhancing the journal's academic impact to further advance the field of media law research. Such efforts are essential in strengthening the journal's relevance and advancing the field of media law in an increasingly complex information society.

Keywords: research trends, meta-analysis, bibliometrics, content analysis, citation analysis

[논문투고일 2025. 03. 03. 논문수정일 2025. 03. 24. 게재확정일 2025. 03. 28.]